

충남리포트 제188호

ChungNam Report

2015. 10. 22.

CONTENTS

〈요약〉

1. 농정거버넌스로서 농어업회의소
2.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및 개념
3. 농어업회의소 운영 현황과 성과
4. 충남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 방안
5. 정책 제언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국민농업포럼 사무국장, limnong@naver.com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정책위원장, joungmc@hanmail.net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3농혁신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요약

- 충청남도는 3농혁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현장성 강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는 이제부터의 과제임
-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농정 거버넌스의 대표적 형태로 제도화되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충남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전국에서 7개 시·군의 농어업 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농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등에 반영하는 성과를 보임
- 충청남도에서는 도 단위 농정방향 설정 및 농정계획 수립 중심의 3농 혁신위원회와 시·군 단위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업 회의소 양립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적인 거버넌스의 확대,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는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되 농어업 인단체협의회,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병행하도록 하여 협치 농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공감대 확산, 민관 협력이 우수한 지역의 시범사업 실시, 3~5년 후 5개 시·군 이상의 농어업 회의소가 모여 충남농어업회의소를 설립·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 정책적으로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와 시·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

농정거버넌스로서 농어업회의소 ◀

01

● 충청남도는 3농혁신을 통한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협치농정을 실현

- 충청남도는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3농혁신’을 선정·추진하였으며, 민선6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 3농혁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유관기관 및 전문가 정책네트워크 구축, 도 농업정책의 체계화·통합화 기틀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각 분야별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측면에서는 농정에 대한 주도적 참여의지 및 현장체감도가 미흡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도 제기됨
- 즉, 농어업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현장성 강화, 시군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 통합시너지 발휘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농정거버넌스가 제도화된 대표적 형태가 농어업회의소

- 농어업회의소는 책임과 참여에 의한 민간의 자발적 농정참여를 제도화 한 것으로 선진국의 농정추진체제로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7개 시군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음
- 포괄보조금, 농업발전계획 수립 등 지방농정체제 강화로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된 농정거버넌스의 모형으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과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1)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

● 농어업의 양적, 질적 위축과 위기감 증대

- 농어업인구, 농림어업 취업자 및 부가가치 비중, 농업 소득 등 주요지표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악화
- 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이 꾸준히 확대되며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
- 농산업 위축 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함

● 농정의 지방화 및 분권화 진전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의 도입
- 중앙정부도 '상향식' 농정추진을 지향하여 공모사업을 꾸준히 확대
- 포괄보조금제도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책임이 계속 확대
- 지자체의 각종 계획을 통합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

● 농어민단체의 농어업인 권익 실현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 표출 한계

- 전국 규모의 농어업인단체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강력한 농업인 권익 대변에는 한계
- 업종 및 품목별 단체가 계속 증가하지만 통일된 역량 결집은 안 됨

2) 농어업회의소의 정의

- 농어업회의소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적용되어 나타난 구체적인 형태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
 - 농정거버넌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가 중심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를 뛰어넘는 농어업인 회원제에 기반을 두고 농어업인 직접 참여를 구체화한 것이 농어업회의소임
- 농어업인의 민의를 수렴하여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조사와 연구, 교육과 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어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어업정책 파트너임
 -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농어업정책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결정·책임을 짐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농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반민반관 형태의 농어업인 자조조직

3) 농어업회의소의 목적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반영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기여
- 특히, 농어업계의 보편·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
 - 정부 및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를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정파트너이자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범농어업계 단일창구로 인정

03

▶ 농어업회의소 운영 현황과 성과¹⁾

● 시군농어업회의소 운영 현황(2014. 7월 현재)

구분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
설립일	'12. 3. 14	'11. 9. 20	'12. 11. 5	'12. 2. 8	'12. 7. 18	'12. 4. 30	'13. 6. 27
개인회원수 /농가수 (비율)	467 /4,711 (9.9%)	950 /4,630 (20.5%)	826 /10,471 (7.9%)	1,294 /11,790 (11.0%)	1,240 /6,560 (18.9%)	755 /9,543 (7.9%)	1,162 /7,703 (15.1%)
상근직원	2명	3명	2명	4명	2명	3명	2명
지원조례	'12. 7. 6	'12. 6. 15	'12. 5. 25	'11. 8. 1	'12. 6. 28	'12. 3. 26	'13. 10. 28

●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정책자문 대의기구	· 농어업회의소 분과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 농업발전토론회 개최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참여 · 지자체와 농어업정책 협의회 운영 ·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농업인 행사 주관
농 어 업 인력육성	· 회원 및 대의원, 임원교육 · 멘토링형 지도사업 추진 · 인력지원센터 운영 · 귀농귀촌센터 운영
조사 및 서비스	· 조사·모니터링사업 (통계 및 등록 확인) · 연구사업 (발전계획 수립) ·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등)
지역특색사업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 사회 공헌 활동

1) 마상진, 농어업회의소 교육·건설링 시범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농촌경제연구원, 2014. 12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요약

● 시군농어업회의소 회비 및 지자체 지원금 현황(2014. 7월 현재, 천원/년)

구분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	평균
회 비	개인	8,640	22,200	19,080	46,560	66,000	18,000	26,400	29,554
	단체	7,560	1,200	2,400	3,960	5,400	3,960	2,400	3,840
	특별	18,960	18,960	14,400	21,000	32,040	18,000	15,600	19,851
	합계	35,160	42,360	35,880	71,520	103,440	39,960	44,400	53,246
예산 지원형태		운영 지원금	출연금	출연금	사업비 보조	출연금	출연금	경상보조	
시 군 지 원	'12	40,000	50,000		100,000	50,000	40,000		56,000
	'13	70,000	50,000	18,000	120,000	50,000	54,000	30,000	56,000
	'14	70,000	100,000	30,000	120,000	50,000	54,000	40,000	66,286

● 국내 농어업회의소 운영 성과

-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이끌어 냄
-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 하고 있음
- 농어업인 간 당면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의회, 행정 등과 농업분야 카운트파트너 및 협력적, 보완적 역할 수행
- 거버넌스 구성 요인 중 대표성, 참여성, 투명성, 형평성 등에서 시범사업 지역이 일반 지역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지자체 농정, 지방의회 활동, 농어업인단체의 의견 반영 만족도도 높게 나타남.

● 국내 농어업회의소 당면과제

- 농어업회의소 대표성 확보의 한계, 회원 의무가입 추진 검토 필요함
- 전문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등 역량 제고 필요
-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필요
- 기존 관련 조직·단체들 간의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운영내실화 방안 도출 및 전국 확산, 농어업 회의소 법제화 등이 필요함

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식

● 3농혁신 2단계 추진을 통해 3농혁신위원회의 기능 전환 방식

- 충남형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농정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농어업회의소 국가 법제화와 연계하여 추진, 늦어질 경우 현행 3농혁신위원회 체계 내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협의·합치기구로 격상 운영
- 3농혁신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무국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장기적으로 3농혁신위원회의 기능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

● 3농혁신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의 역할분담을 통한 양립 방식

- 3농혁신위원회를 당장 농어업회의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행체계 상실, 현실적인 농어업인단체의 역량 부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됨
- 3농혁신위원회의 농어업회의소 전환 보다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양쪽의 장점을 살리면서 양립
- 3농혁신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양립을 통해 지속적인 거버넌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직접 참여 강화를 정책 목표로 추진
- 도 단위 농정방향 설정 및 농정계획 수립 기능 중심의 3농혁신위원회와 시군단위 농어업인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가 양립
-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 기구의 공통점과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강화

2)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방안 제안

- 농어업인이 시군 농어업회의소에 참여,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도(광역) 농어업 회의소 설립
 - 회의체계 구성 등 현실적인 문제로 농업인들이 직접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어려움
 - 예산편성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위인 기초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농어업인이 회원으로 참여
 - 즉, 농어업인이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만들고 이들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도 단위 농어업인단체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구성

- 농어업회의소 외 농어업인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 확대
 - 시군별로 지역의 특성과 환경이 각기 다르고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강제하여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농어업회의소를 장려하되 이것을 유일한 형태로 고집할 필요는 없음
 - 농어업인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농어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전문가, 공무원, 농어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협치농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 시군 농어업회의소 또는 거버넌스를 확대를 위한 사전 요건
 - 시군 지자체장이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함. 또한 농어업인의 의사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민간 기구를 인정하고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해야 함. 또한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을 장려하는 지원으로 뒷받침하여야 함
 - 지자체장의 지원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스스로의 자조조직이므로 농어업인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즉,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장의 지원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3)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로드맵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기구 운영, 공감대 확산

-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협치농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함
-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다양한 형태,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
- 도 단위 집합교육과 시군 순회 설명 등을 통해 시군 단위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관협력 우수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

- 농어업인의 직접적 농어업 정책 참여 기능을 중심으로 농어업인 대의기구이자 대표 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 확장
- 농어업회의소와 함께 시군 단위의 농어업인단체협의회, 농업발전협의회 등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 연간 시군 농어업회의소 2개소를 설립해 나갈 경우 3년이면 6개, 5년이면 10개 시군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농민단체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도 시군마다 충분히 성숙
- 충청남도 관내 모든 시군, 또는 과반인 8개 이상의 농어업회의소가 함께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
- 그러나 5개 이상의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도 됨. 대표성의 제약이 있으나 운영의 개방성으로 극복 가능함
- 결론적으로 3년 이상의 시범사업 전개 로드맵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가능

4)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시 고려사항2)

● 충남형 농어업회의소의 목표

-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측면의 지역자치의 실현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실현을 위해 노력
- 농어업회의소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농어업인 대표조직으로서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자기 역량에 맞는 점진적 발전을 채택
- 경제적 측면의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극대화의 방향 및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업간 연계와 결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농어업회의소 자체가 경제조직, 사업조직화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어업인의 의견을 대폭 반영

- 농어업회의소는 행정의 농정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므로 행정의 체계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농어업인, 특히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 시군, 읍면, 마을(리) 등 범위의 다양화

-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를 근간으로 설립되고 있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광역시도 단위의 농어업회의소와 전국 단위의 중앙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 농어업회의소는 시군 단위 농어업인 회원제 조직을 기본으로 하되 농어업회의소의 현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읍면, 마을단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업회의소의 역할 및 사업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농정 참여 및 자문기능을 기본으로 농어업발전 및 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농어업농어촌발전 종합계획수립 참여, 농지조사업무, 농어업인경영체 등록, 청년취농·귀농귀촌 지원 등은 고유의 근본사업이 될 수 있음

2) 김호, 충청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검토, 농어업회의소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2014. 11.의 충청형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 검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기초로 내용 보충

- 사업은 재정확보 방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위탁사업을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농어업인 대의기구 역할 및 농정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사무국 역량의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가며 농어업인 서비스 제공, 위탁사업 운영 등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 기관의 고유 영역 침해 가능성 검토

-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국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농촌지도기관 중심의 대농민 서비스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간이 쉽게 대체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의 농정집행기능 또한 민간이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기능 중복 문제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불러와 농어업회의소의 출범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논의를 자제해야 함
- 시범사업 시군의 사례처럼 기존 기관을 보완한 농어업인 상담 및 지도,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도화 및 재정 확보

-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 지자체에서는 농어업회의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지자체의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농어업회의소의 재원은 회비, 지원금(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중앙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공모 및 위탁사업 운영비 또는 수수료로 충당됨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 설치, 지원 사업 도입 방안

- 3농혁신위원회 산하 또는 연계조직으로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고 촉진하며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 전국 단위 농어업회의소 지원조직 및 시군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및 3농혁신위원회 위원, 충남도 농민단체 임직원, 시군 농어업인(단체) 대표, 지자체 실무자 등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참여
- 지원기구는 농어업회의소를 비롯한 농정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총괄하여 진행
- 농어업인 역량강화 및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는 물론 시군 단위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발전위원회, 충남농민단체협의회 등의 각종 활동도 지원
- 지역리더 발굴을 위한 도 단위 교육사업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시군별 순회교육,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견학 및 연수프로그램 진행,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군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실시

- 시군별 사전 교육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자발성과 민관 협력도가 높은 시군을 발굴 매년 2개소 이상의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
- 시범사업은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형태로 간접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사업과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의 사업을 혼합하여 시행
- 설립 시기에는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설립 이후에는 1명의 상근 직원과 부대되는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

●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제도화 및 재정자립화 방안 지속 연구

-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유일한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고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및 국회는 준비단계임
-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시군 조례와 같이 농어업회의소를 지자체의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은 농어업회의소의 관변조직화를 방지하여 농어업인 대의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는 선례가 없어 기존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현장의 요구와 중앙의 정책을 조율하며 재정자립 방안, 도 단위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함

임 성 규 사무국장

국민농업포럼

02-3471-4240, limnong@naver.com

정 명 채 정책위원장

국민농포럼업

02-3471-4240, joungeomc@hanmail.net

◆ 참고 자료 ◆

- 강민수 외(2011). 「시군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매뉴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국민농업포럼(2014).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농어업회의소 설명자료」. 국민농업포럼.
- 김수석 외(2010).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 호(2014).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검토. 「농어업회의소 추진 현황과 발전전망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마상진 외(2014). 「농어업회의소 교육 컨설팅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영범(2010).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방안」.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102-3. 1~24.
- 유정규(2010). 「지방자치시대,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과 역할 모색」.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102-2. 1~17.
- 이정환(2010). 농정거버넌스: 그 의미와 대안.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102. 1~12.
- 이호중 외(2014).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 임성규 외(2014). 「시군농어업회의소 자립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용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정명채(1991). 농어민단체의 발전방향. 「농림수산정책개발세미나」. 공무원교육원.
- 정명채(1998).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실태와 설립방향. 「농어업회의소정책세미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정명채(2014).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발전방향. 「농어업회의소 설명자료」. 국민농업포럼.
- 충남발전연구원(2014).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 충청남도
- 충청남도3농혁신위원회(2014). 「3농혁신 1단계 성과와 2단계 중점추진 계획」. 충청남도.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ChungNam Report